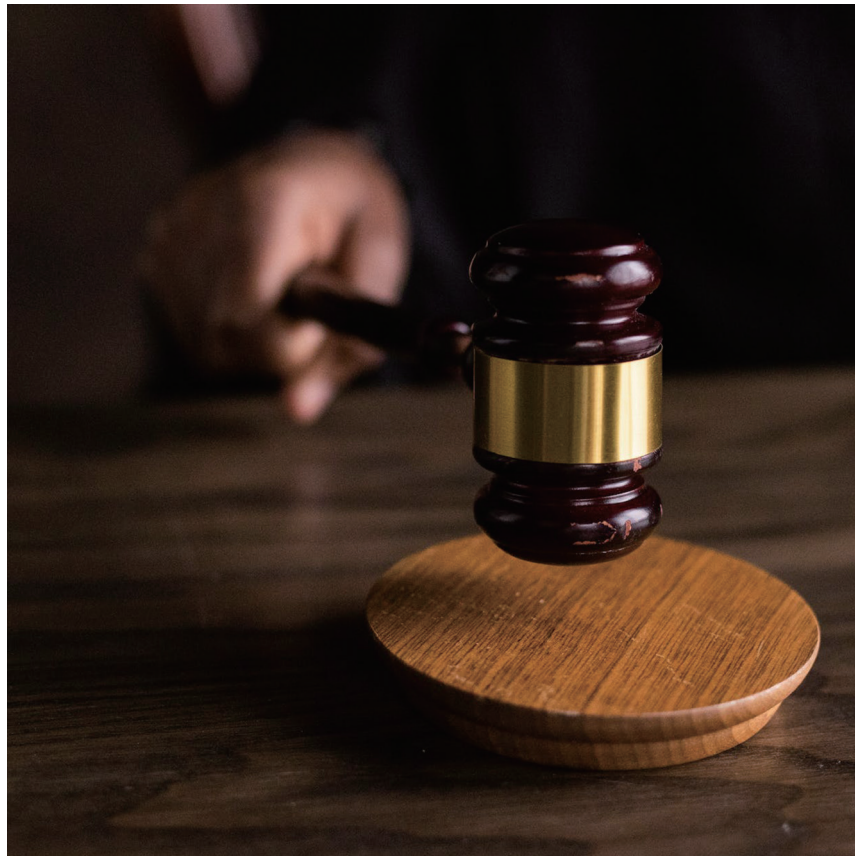


#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유족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할 수 있다고?”

수원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1나99760 판결... 채권양도의 법리 인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아님에도 공탁금을 직접 찾게 된 “최초의 판결”

보험사-보험소비자간 소송戰이 점입가경이다.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해도 약관해석을 달리하거나 자체 자문결과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한 성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본지는 ‘보험금 소송서 뜨거운 쟁점이 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평석을 제공코자 한다.

국내최고 보험법 전문가 박기억 변호사(現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가 제공하는 보험·손해배상 소송관련 판례평석이다.



보험수익자가 회사로 지정된 단체보험에서, 근로자가 퇴근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공탁(채권자 불확지)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이 직접 공탁금을 찾을 수 있다고 본 사례!

이 사건은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아님에도 공탁금을 직접 찾게 된 최초의 판결로 보이는데, 소송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공부 차원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사안의 개요

◇ **피고의 단체보험계약 체결**=피고(회사)는 소외 보험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수익자를 피고(회사)로 하여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사용자 측 대표 3명과 근로자 측 대표 3명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약내용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의 직원이던 망인도 이러한 규약에 동의하였다.

- ① 당사는 복지제도목적으로 2014. 6. 9. ○○생명(배우자, 자녀, 부모)을 피보험자로 하여 기업복지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하며, 최초 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② 이 계약은 보험료 전액 회사가 부담하며, 상해 시 수익자는 회사, 사망 시 수익자는 회사로 한다.

③ 회사가 수익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생명으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 대한 회사지원 위로금 용도로 사용한다.  
(회사는 지급받은 보험금 중 피보험자에게 50%를 지급한다)

◇ **망인에 대한 재해 발생**=망인은 2018. 8. 16. 퇴근 이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다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망인의 상속인은 원고들을 포함하여 4명인데, 피고가 상속인들에게 수익자가 피고(회사)로 지정되어 있으니 피고가 사망보험금을 받아 일부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자(마치 한 톨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인정상 일부라도 주는 것처럼 수차례에 걸쳐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것임), 상속인 중 2명은 피

고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상속인 2명(원고)은 피고의 제의를 거절하였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공탁**=피고는 ○○생명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다. 보험사인 ○○생명은 망인의 상속인과 수익자인 회사가 모두 자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자, 망인의 상속인 중 피고의 보험금 수령에 동의하지 않은 원고의 지분상당액은 그 수령인이 원고들인지 피고인지 과실 없이 이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피공탁자를 원고들과 피고로 하여 이를 공탁하였다.

### 원고들의 소송 제기

#### 보험금 청구권 채권양도 + 공탁금출급권 확인

우선, 인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권자는 수익자인데, 망인(피보험자)의 상속인에 불과한 원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어떤 법리로 접근해야 하는지부터 문제였다. 특히 이 사건은 매우 드물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공탁해 버린 상황이어서, 어떤 법리로 청구취지를 구성해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보험사고는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은 종국적으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7028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① “피고가 원고에게 공탁금출급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하라”는 취지와 이어서 ②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구성하였다.

### 법원의 석명준비명령

그러자, 제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석명준비명령을 발하였다.

#### 석명준비사항

1.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와 보험금 지급청구권 양도청구의 관계의 측면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청구취지 제1항과 제2항의 관계의 측면에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정리하라는 것.

당초 청구취지를 제1항(채권양도)과 제2항(공탁금출급권 확인청구)으로 구성한 것은, 망인의 상속인은 수익자가 아니므로 보험금 청구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회사)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받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로 하여금 공탁된 보험금의 출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라는 청구를 하고, 이어서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에 (위 주문으로 법원 공탁계에서 원고에게 공탁금을 출급해 줄까하는 의문이 생겨) 제2항으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한 것인데,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1차)

그 동안 다른 사건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였는데, 이 사건은 보험사가 해당 보험금을 공탁함으로써 보험사는 분쟁에서 빠져나갔고, 그렇다면 결국 보험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망인의 상속인과 수익자인 회사 사이에 공탁금출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투는 것이므로, 굳

이 채권양도가 필요없고(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원고에게 보험금이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곧바로 공탁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만 받으면 족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리하여 청구취지를 당초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확인청구)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 제1심 판결

원고 청구 기각 (패소), 그러나 공탁금은 전액 원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이에 대하여 제1심은, 피고가 ○○생명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이 사건 규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그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에 있어서는 누가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00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험수익자는 피고이므로 피고가 ○○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자체가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사실 제1심이 기각의 이유로 삼은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의 법리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고, 피고도 언급하지 않은 법리였는데, 갑자기 판결문에 기각의 근거로 등장하여 원고 입장에서는 불의타가 되었다고나 할까.)

## 원고의 항소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제2차)

원고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 단체보험에서 보험금이 공탁되었을 경우, 원고가 직접 공탁금을 찾을 때 구사할 수 있는 법리를 모두 정리해 보았는데, 다음 3가지 정도로 생각되었다.

- ① 확인청구소송 : 업무 외 재해의 경우,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서 보험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므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 ② 채권양도와 양도통지 :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공탁금출급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도록 하는 방법!
- ③ 채권자대위를 이유로 한 확인청구 : 원고가 피고의 공탁금출급권을 대위 행사하는 방법!

위 3가지 방법 중 어느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수익자인 회사가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나 규약의 내용 여하 등에 따라 어느 법리가 타당한지 달라질 수 있는데다가(재판부마다 위 법리를 인정할지 말지, 인정한다면 어느 법리를 인정할 것인지가 다름), 단체보험에 있어서 유족이 공탁한 보험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를 찾을 수 없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위 3가지 청구취지를 모두 포함시키되, 제1선택적으로 ① 확인청구와 ② 채권양도와 양도통지를 구하고, 제2선택적으로 ③ 채권



자대위로 인한 확인청구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신청(2차) 하였다.

원고로서는 위 3가지 청구취지 중 어느 하나라도 인정받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위 3가지 청구취지를 선택적 청구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 당사자들의 주장(항소심)

◇ 원고의 주장=망인이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업무 외 재해'이므로, 피고(회사)가 수익자로 되어 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피고에게 귀속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따라서 공탁금출급권도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의 주장=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피고이므로 원고에게는 보험금 청구권이나 공탁금출급권이 없고, 피고는 규약에 따라 보험금 중 50%만 원고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이며(소제기 전에는 50%도 안 되는 금액으로 합의할 것을 제외함),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있다.

제2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아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보전의 필요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며, 제3채무자가 아닌 채무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조정회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는데, 조정기일에 원고와 피고 모두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피력하였다.

상임조정위원회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탁금의 50%에다가 위로금 500만 원을 더하여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지만, 원고는 즉시 이의신청하였다.

결국 다시 재판부로 넘어가 여러 차례 공방을 벌인 끝에 판결이 선고 되었다.

**제2심 판결****일부 승소, 그러나 공탁금은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내용!**

채권양도와 양도통지의 법리를 채택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선택적 청구(제1선택적 청구의 확인청구 부분과 제2선택적 청구)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 **판결 내용**=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 자체는 피고에게 있다.

이 사건 규약에는 복지제도의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가입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직원들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나아가 ○○생명으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 대한 회사지원 위로금 용도로 사용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으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예정하고 있지도 않다. 설령 이 사건 규약에 따라 피고가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보험금 수령 시 피보험자에게 수령한 보험금 중 50%만을 지급하는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업무외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 시에도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보유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규약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규약은 업무상 재해와 업무외 재해를 구분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자신에게 업무상 재해가 아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는 것을 용인할 의도로 이 사건 규약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규약이 업무외 재해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유하기로 한 특별한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보험사고가 망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생명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경우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보험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무의 발생**=피고는 보험수익자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이를 수령하여 그대로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탁금출급청구권처럼 다른 사람의 별도 행위 없이 스스로 언제든지 이를 행사하여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변제금을 수령한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령액의 즉시 지급에 갈음하여 그 권리 자체를 원고들에게 그대로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된다. 이와 달리 피고가 공탁금을 현실로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그 수령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 그 수령 전에는 원고들이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하게 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게 될 공탁금을 아예 수령하지 않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그대하기 어려워 원고들이 보험금 상당액을 전액 지급받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중 각 상속지분에 따라 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간단 논평**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그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가입 목적에 비추어 수익자는 직원이나 직원의 상속인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도 있다.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회사 대표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직원을 살해하는 등 오히려 직원의 생명·신체가 위협받는 경우도 생긴다.

대법원은 회사가 수익자인 단체보험의 경우, ‘업무상 재해’와 ‘업무외 재해’로 나누어, ‘업무외 재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인 직원 또는 직원의 유족에게 보험금이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직원의 유족이 어떤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직원이 사망한 경우, 수익자인 회사와 유족은 보험사에게 서로 자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므로, 보험사는 어느 한쪽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사가 수익자인 회사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유족의 확인서를 받고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유족의 동의서가 없을 경우 보험사는 아무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그 동안 소송이 제기되면 판결 결과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보험사가 수익자인 회사와 직원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험금을 공탁한 경우(채권자 불확지 공탁), 망인의 유족은 어떤 방법으로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필자가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해 본 결과, 단체보험에서 공탁된 보험금을 둘러싸고 다투어진 사례는 단 한 건이 보였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20가단102303 판결! 그러나 이 판결은 유족이 직접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었다. 공탁금출급권은 회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회사가 공탁금을 출급할 경우 유족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라는 것(위 사건은 회사가 원고가 되어 공탁금출급권이 회사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유족은 반소로 회사가 받을 공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임). 만약 회사가 공탁금을 출급하

지 아니하면 어찌될까? 회사로서는 공탁금을 출급해도 전액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굳이 공탁금을 출급할 이유가 없을 텐데, 그러면 유족은 어찌해야 하는지가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한 판결은 이러한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법원이 수익자인 회사로 하여금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유족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라고 판시하였으므로, 유족은 수익자인 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직접 법원에 공탁금 출급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공탁한 이상, 결국 회사와 유족 사이에서 누가 공탁금의 귀속자인지의 문제이고, 그렇다면 궁극적인 보험금 귀속권자인 유족이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너무 형식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필자로서는 가능한 모든 법리를 동원할 필요가 있어 여러 가지 법리를 주장하였고, 그 중의 하나가 인용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판결에서도 유족을 ‘실질적인 보험수익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형식적인 보험수익자와의 관계에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유족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었을까?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에 있어서 누가 공탁금출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는 단체보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싶다. 단체보험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말이다.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법리도 단체보험에서는 예외를 허용하는데, 상대적 불확지의 변제공탁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허용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복잡한 법리(채권양도 이론, 채권자대위권의 법리 등)를 내세우지 않아도 유족이 직접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단체보험에서 유족이 공탁된 보험금에 대하여도 직접 출급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는 방법(법리)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그 의미가 매우 크고, 앞으로 이러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로 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Ins**



#### 글\_ 박기억 변호사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보험분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보험면)으로 근무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